

KREI NEWSLETTE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04년 11월 30일 발행 (월간·비매점) 등록 서울 라-02663(1982.4.29) 발행·편집인 이정환(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02)3299-4000/인쇄인 김재국/(인쇄·주)문원사

“2014년 MMA, 8%까지 수용할 수도”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 11월 17일 개최



지난 11월 17일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를 가졌다.

우리 연구원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17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강당에서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300여명이 참석,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관세화 유예 기간, 물량 이견

이날 토론회는 이정환 원장의 사회로 열려 먼저 농림부 윤장배 국제농업국장 이 ‘쌀관세화 관련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윤국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관세화 유예시 주요국에서는 10년 연장에 동의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중간점검을 통해 5년 유예연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관세화당량물량도 10년차 8%와 8.9%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연구원 서진교 연구위원이 ‘쌀관세화의 파급영향과 선택기준’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서연구위원은 “확률분포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2005년 관세화시 2014년 쌀 예상수입량은 평균

6.3~6.4% 수준이 될 것이며 관세화시 예상 밖의 수입급증 위험을 줄일 경우 MMA 허용한도는 2014년 7.1~7.5% 수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리고 “관세화유예를 받아 운영하다가 관세화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MMA 허용한도는 8%를 다소 초과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14년 MMA 허용한도 7.1~7.5% 예상

농림부 김영만 식량정책국장은 ‘쌀농가 소득안정 및 양정제도 개편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쌀 목표가격을 170,070원/80kg으로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80%를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쌀소득직접지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김충실 WTO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관세화 유예라는 입장을 고수하되 현실적인 선에서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진근 충북대학교 교수는 지금 관세화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송유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도 관세화로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을 폈다.

관세화 유예 등 다양한 의견 제시

반면에 박용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협상을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협상을 하자고 주장했으며,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추가개방 반대와 수입쌀의 시장격리력, 홍준근 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생산으로 인한 부가 가치까지도 농업소득으로 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원 중앙대학교 교수는 관세화하면 시장논리에 의해 농업과 농촌은 자생력을 잃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상일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쌀 시장을 개방한 후 국내시장에서 가격으로 견제할 수 있는 여지를 찾는 것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 임정빈 경성대학교 교수는 협상의 질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며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각각 폈다.

2005 농업전망대회 1월 28일 개최

- 주 제 : 한국농업의 도전과 비전
- 일 시 : 2005년 1월 28일(금) 09:30~19:30
- 장 소 : 코엑스 그랜드 볼룸(삼성동 소재)
- 접수 및 안내 :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

농업관측, 시대변화에 맞게 재도약 준비

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다양한 노력 경주

우리 연구원이 1999년 시작한 농업관측사업이 시대변화에 맞게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디지털화, 첨단화, 국제화 추구

1999년 농인법에 근거해 농업관측센터를 설치해 그동안 한 호도 거르지 않고 '관측월보'를 발행했다. 또한 매년 초에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해 장단기 국내외 농업 및 경제전망과 품목별 전망을 발표, 농업인과 농업관련기관에 관측과 전망정보를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사업 수행을 위해 관측전문가를 확충하였으며 KREI ASMO 총량모형과 KREI COMO 품목관측모형을 개발, 활용하는 등 관측기반을 확충하는데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조사기법의 디지털화, 분석모형의 보완, 해외정보 수집체계 확충, 지리정보시스템(GIS) 응용, DBDW 개선 등 농업관측의 디지털화, 첨단화, 국제화를 지향하며 재도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농업관측사업은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과 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해 농업인의 영농계획, 정부 및 지자체, 농업관련기관과 단체의 사업계획, 수급계획, 영농지도 등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수급과 농가소득인정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세계적 기상이변 등에 대응해 농업경제를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중장기 예측정보를 생산, 시의적절한 대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지원되고 있다.

소비자패널과 국제정보망 구축

농업관측정보센터는 채소관측팀, 과일관측팀, 과채관측팀, 축산관측팀, 농업정보화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관측은 1999년 배추, 무 등 9개 품목으로 시작하여 현재 26개 품목에 대해 월별 관측 또는 분기별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채소관측은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양배추, 감자 등 9개 품목, 과일관측은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등 6개 품목,

과채관측은 오이, 호박, 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 등 6개 품목, 축산관측은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등 5개 축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사업은 지난 5월에 표본농가를 재설계하여 10,961호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산지정보를 신속·정확하고 편리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산지모니터인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 품목담당자들에게 개인휴대 단말기인 PDA를 지급하는 산지정보수집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착수하였다.

미국 FAPRI와 축산 모형 공동 개발

또한 해외정보수집 강화를 위해 중국 현지모니터를 20명으로 확대했으며, 미국 FAPRI와 축산모형을 개발 중이고, 호주 ABARE 등과 관측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있다. 그리고 산지정보 뿐만

아니라 소비자정보의 정기적인 수집을 위해 소비자패널 1,000명을 구축하였다.

또한 지난해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outlook.krei.re.kr)를 오픈해 26개 품목의 가격, 반입량 동향 및 중국 도매시장 품목·지역별 가격자료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관측정보지원시스템', '농축산물 생산·수급정보 분석시스템' 및 '통계분석시스템'의 수급모형을 온라인상에서 직접 분석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대폭 보완해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내년에는 GIS를 이용한 관측정보제공시스템을 개발해 지역적인 상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계획이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관측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품목별 및 국내외 농업의 중장기 전망을 위해 199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초 '농업전망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전망대회는 2001년 이후 1,000명이 넘게 참석해 명실상부한 대회를 자라래김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 대상 조사, 벤치마킹



FAL을 방문, 이저마이어 소장으로부터 연구원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12월 4일까지 일본의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아시아농업경제연구소 등을 시찰, 조사 중이다.

특히 덴마크와 독일 연구·조사팀은 전문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덴마크, 독일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우리 연구원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을 조사해 벤치마킹하여 연구원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외 조사·연수를 실시했다.

올해 우리 연구원은 1차적으로 국내외 기관 중 행정과 연구 관리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있는 국내 연구기관을 조사했다. 그리고 두 팀으로 나눠 1차로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덴마크의 식품경제연구소(FOI), 독일의 연방농업연구소(FAL), 농가와 농촌을 시찰하고 조사했다. 또 한 팀은 11월 29일부터

또 한 팀은 11월 29일 출발해 일본의 농림수산정책연구소와 아시아경제연구소를 방문·조사하고, 쌀 갤러리, 농협, 농촌현장, 농과대학 등을 방문하도록 계획되어 우리와 유사한 여건을 갖고 있는 일본 연구원의 운영 노하우 뿐만 아니라 선진화 되어 있는 일본 농업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국내외 연구기관을 조사하고 농업·농촌을 시찰한 것을 보고서로 발간해 업무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자랑스럽게 내 놓을 수 있는 연구 위해 최선

11월과 12월, 연구 마무리에 총력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36 과제의 연구결과세미나가 있었다.

우리 연구원 이정환 원장은 인트라넷 (AGRE)을 통해 직원들에게 “외치려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자랑스럽게 내 놓을 만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당부했다.

올해 우리 연구원은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38과제의 연구결과세미나가 이루어져 연말에 끝나는 과제가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11월과 12월을 연구 마무리 총력의 달로 정하고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정환 원장은 그 동안 연구를 위해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이제 올해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랑스럽게 내 놓을 수 있는 연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도별 연구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연초에 연구계획을 세워 2월부터 연구 설계세미나를 시작해 3월까지 마친다. 이어 연구 중간에 부서별로 검토회의를 가져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면서 연구를 수행한다. 그리고 10월 하순부터 연구결과세미나를 시작해 11월 중하순까지 세미나를 가져 최종 연구내용을 보강해 연말까지 연구를 마치고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까지 연구과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자들도 결과세미나를 마치고 연구 마무리를 위해 11월과 12월 주말은 물론 밤 늦은 시간까지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올해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속에서 농업·농촌 부문이 국가

사회 발전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초 및 정책 연구를 강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총 159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분야별 연구과제는 농업 발전 기초 연구 52과제, 농업경쟁력 강화 연구 21과제, 농산물 유통 및 정보화 연구 24과제, 지역경제 및 복지 연구 15과제, 임업육성연구 11과제, 국제화·통일대비 연구 37과제이다.

한·EFTA FTA 공청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를 지난 11월 12일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현오석 무역연구소 소장의 인사에 이어 김한수 FTA담당 심의관이 한·EFTA FTA 추진 동향을 보고한 뒤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날 공청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박수 선임연구위원 사회로 열려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FTA 팀장이 ‘한국과 EFTA 경제·통상 관계’란 제목으로 이어 우리 연구원 어명근 연구위원이 ‘한-EFTA FTA와 농업부문’이란 제목으로, 강릉대 김남두 교수가 수산분야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연관 부연구위원이 한 EFTA FTA 경제적 효과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지정토론과 방청객들의 토론이 있었다.

쌀, 농지, 쇠고기 보고서 발간

우리 연구원의 박동규 연구위원은 ‘쌀농가의 소득·경영안정 직불제 도입과 양곡관리 제도 개편(16권)’이란 제목으로 농정연구속보를 발간해 배포했다. 박연구위원은 이 연구를 통해 쌀농가 소득·경영안정 직불제 도입의 목적과 양곡관리 제도 개편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박석두 연구위원, 송미령 부연구위원, 김수석 부연구위원, 김홍상 연구위원은 ‘농지제도 개편의 방향과 추진방향(17권)’이란 제목으로 농정연구속보를 집필·발간했다. 연구자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지제도의 단계적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송주호 연구위원은 11월 12일자로 ‘쇠고기 소비변화 분석’(P21)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LOVE米 마라톤대회 우수기관상 수상



LOVE米 마라톤대회에 60여명의 연구원 가족이 참가했다.

우리 연구원 체력단련회(회장 강창용)는 농민신문사가 지난 10월 31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한 제3회

LOVE米 농촌사랑 국제마라톤대회에 60여명의 연구원 가족들이 참가했다.

이날 LOVE米 농촌사랑 국제마라톤대회에 참석한 우리 연구원 가족들은 등에 ‘농촌사랑 나라사랑’이란 글귀가 인쇄된 등판을 달고 뛰어 이목을 끌었다. 3년 동안 우리

연구원은 빠짐없이 LOVE米 농촌사랑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한 공로로 우수기관상을 수상해 기쁨이 배가 되었다.



쌀농가 소득안정대책의 중요성과 효과

박 동 규 연구위원

정부는 쌀협상 이후 쌀농가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쌀농가 소득안정대책 시안을 발표하였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남아있고 시행 방안 중 일부가 조정될 여지가 있지만 소득정책을 보다 강화해 쌀농가의 소득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정책변화인 것으로 평가된다.

쌀협상 결과에 대한 불안감 해소

연말까지는 향후 쌀수입 방식을 관세화로 전환하거나 관세화유예를 지속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실리에 입각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가의 장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관세화유예를 지속하는 경우 의무수입물량(MMA)은 현재보다 많이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해 당사국은 수입쌀의 일정비율을 밥쌀용으로 시중에 직접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쌀가격 하락과 소득감소가 예상된다. 대만은 2002년 한해의 관세화유예 대가로 MMA 8%를 보장하였으며 MMA 물량의 35%를 민간이 자율 수입하며 해외원조 및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한 국영무역으로 관리하는 물량도 장기간 동안 보관해 식량용 사용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간 보관 후 시장에 출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가 관세화유예를 지속하여도 시장출하 물량이 늘어나 쌀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쌀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지는 의무수입물량 증량 수준 및 관리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농가가 직면하는 불안감은 증폭될 수 있다.

관세화로 전환하면 수입량은 국제 쌀 가격, 환율, 관세 수준에 따라서 결정

될 것이다. 쌀 가격 등 주요 변수가 안정되어도 DDA 농업협상의 타결 내용에 따라서 수입량은 크게 변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특별품목 또는 민감품목에 대해 관세가 얼마나 줄어들고 이에 상응한 대가는 얼마나 될 것인지, 관세 상한이 설정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변하게 된다. 쌀시장이 관세화로 전환되는 경우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 만큼 쌀가격 및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전망하기 어렵고 농가의 불안감은 매우 큰 상황이다.

쌀협상결과에 따라 2005년 이후 쌀가격과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쌀협상에 대한 저항감이 고조되고 규모 확대 등 신규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쌀농가소득안정대책은 쌀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기준년도 가격을 기초로 일정수준의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쌀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소득안정대책이 제도화되면 농가입장에서 관세화나 관세화유예는 무차별하게 되어 실리에 입각한 쌀협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쌀가격 급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고 쌀산업의 연착륙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경쟁력 제고에도 기여

소득안정대책이 도입되면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농가는 시장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차이를 정부로부터 직접지불 방식으로 보전받아 쌀가격이 하락해도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 이러한 직불제도가 도입된다면 농가는 실질소득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면적 확대, 품질고급화, 생산비 절감 등 상당한 자구노력

이 필요하다. 또한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의 순응요건으로 농가는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고 환경 친화적인 영농방식을 채택과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납세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시장기능에 의존하면 쌀가격은 연간 2~3%씩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므로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쌀을 소비할 수 있으며 대외 가격경쟁력도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쌀가격이 시장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면 정부의 재고부담, 재고관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정책

80kg당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소득안정방안이 가격지정정책으로 인식되고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쌀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생산된 물량에 대해 가격을 보장하면 생산을 자극하여 공급과잉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소득안정직불제는 기준년도 면적과 단수를 기초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해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년도 면적이나 생산량을 기준으로 소득을 보전하면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공급과잉으로 연계될 수 있다. 기준년도 면적이나 단수를 기준으로 소득을 보전하면 농가는 그 당시의 시장 여건에 따라서 타작목으로 전환하거나 집약 생산을 억제하도록 하므로 과잉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표가격을 설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직접 보전하는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년도 면적이나 단수를 설정하여 소득을 지원해주고 있다. ■

쌀협상 최종 선택의 순간이 다가와

서진교 연구위원

쌀 협상은 이제 선택의 순간에 이른 것 같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과의 막바지 쌀 협상에서 핵심 쟁점에 관하여 미국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초 중국과의 8차 협상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금년 말로 설정되어 있는 쌀 협상의 시한을 감안할 때 조만간 관세화유예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최근의 쌀 협상 동향을 알아보고 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본다.

의무수입물량의 배분에 큰 어려움

쌀 협상의 핵심 쟁점은 관세화 유예를 몇 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유예기간 문제와 그에 따른 의무수입물량(MMA)의 확대 폭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소비자 시판문제와 MMA 배분 문제도 협상의 성공적 타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다.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대개 10년으로 입장이 좁혀지고 있다. 물론 협상 상대국 모두가 이에 완전한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 일부 핵심국가는 10년을 인정하는 대신 지금 수준의 두 배가 넘는 9%에 가까운 MMA 증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은 MMA를 최소로 낮추는 것이어서 여전히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MMA의 배분도 협상타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MMA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자국에게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MMA 배분문제는 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9개국 모두에 관련된 문제로 소위 제로섬(zero sum)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만큼 다른 국가의 이해가 침해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문제자체가 공동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MMA 배분문제는 우리나라와 협상 상대국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소비자 시판문제도 미해결 쟁점

한편 MMA 배분은 협상 상대국 입장에서 보면 유예를 인정하는 대가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국가라도 쉽사리 타협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시판 문제도 합의도출에 상당히 걸끄러운 문제이다. 일부 국가는 여전히 MMA의 75%를 시중 판매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민간자율수입 비율이 35%임을 감안한다면 75%는 우리나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민간수입비율과 시판비율문제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민간수입 비율은 말 그대로 민간이 시장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입하는 비율을 의미하지만 시판비율은 수입주체와 상관없이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가운데 상당 부분을 시중에 유통시켜야 한다면 외국쌀에 대한 우리 소비자의 취향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국내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 비율을 낮추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렬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이렇게 본다면 쌀 협상은 언론에서 주로 보도되었던 유예기간과 MMA 수준만의 함의로 타결되는 협상이라기보다는 시판비율이라든지 또는 늘어나는

MMA를 놓고 저마다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상 참가국간 이해가 대립되는 가운데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협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쌀 협상은 설령 유예기간과 MMA 수준에 관하여 협상 상대국의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해도 시판비율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또는 MMA 배분에 있어서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면 사실상 결렬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쌀 협상 동향을 보면 이러한 흐름이 감지된다. 핵심 이해당사국과의 협상 결과는 MMA 수준도 문제이지만 오히려 MMA의 국내시판비율을 놓고 우리나라와 상대국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MMA 배분을 놓고서도 우리나라를 매개체로 일부 핵심국가간에 밀고 당기는 이해관계가 원만히 조정되지 않은 인상이다. 최종 합의도출 순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쌀 협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12월 중순, 최종 선택의 순간이 될 듯

향후 쌀 협상은 12월초 미국이나 중국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고, 또 상황 여하에 따라 장관급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서 고위급 접촉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무선에서 최종 확인된 관세화유예의 조건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년 말로 설정된 쌀 협상의 시한을 고려해 볼 때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정부가 관세화 또는 유예지속에 대한 최종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그 전에 모든 협상결과가 공개될 것이고, 공청회를 통하여 쌀 농가는 물론 도시 소비자까지 포함한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정부의 최종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

인도, 농산물 수출국으로 등장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지난 8월 1일 기본골격을 합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국가는 미국, EU, 호주, 브라질, 인도 등 소위 NG 5이다. 같은 개도국인 브라질은 수출국 입장이니, 인도는 수입국 입장에서 개도국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

브라질은 수출보조금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 집단인 케언즈 그룹 회원이지만 인도는 케언즈 그룹에는 속하지 않는다. 또한, 하빈슨 의장초안에서 특별품목 개념을 제한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개도국의 민감품목(SP)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인 G33에도 속하지 않고, 단지 G20에 가담하면서 브라질과 함께 개도국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가 5개국의 한 축을 형성하여 교착상태에 빠진 DD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농산물 수출국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인도 농업의 명암을 살펴본다.

녹색혁명으로 식량자급 달성

인도에서는 1960년대 후반 대규모 식량위기를 전후하여 '녹색혁명'이 일어났다. 북쪽 편잡지방에 도입된 다수확 소맥이 197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80년대에는 소맥 이외의 작물에도 녹색혁명이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도는 식량자급을 달성하였다.

자급 달성 후에도 인도의 곡물생산은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2004년에는 쌀 8,300만톤(백미), 소맥 7,200만톤 수준에 달하여 10억 인구의 자급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수출도 증가하여 2000년 이후 매년 쌀은 280~630만톤, 소맥은 100~530만톤 정도를 수출하는 소위 순수수출국으로 등장하였다.

인도가 곡물 순수수출국으로 도달한 요인을 살펴보자. 먼저 인구 증가율이 1.6%까지 떨어져 농산물 국내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 정부수매가격이 매년 인상되어 증산을 자극했다. 반면에 80년대에는 증산으로 인해 하향세를 유지했던 공적배급제도 하의 배급가격도 상승하여, 배급 판매도 둔화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재고가 늘어나, 1995년에는 쌀과 소맥만으로 3,600만톤이라는 재고를 안았다. 이것은 적정재고율을 60%나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재고부담을 수출에서 활로를 찾았던 것이다.

수출국으로 등장한 인도는 DDA 농업협상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다. 인도 협동조합중앙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인도 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우대 조치를 선진국에 요구하면서, 선진국에 대해 국내보조와 지지 가격 감축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선진국이 인도 등 개도국

농산물에 대해 추가적 시장접근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는 입장이다.

과잉재고를 수출로 처리

그러나 10억 인구를 안고있는 인도는 식량안보를 중시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말할 때는 식량 공급량이 충분한가 하는 측면과 식량을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라는 측면으로 나누어서 검토할 수 있다.

우선 생산면에서는 수출이 과잉될 정도로 국내 공급량이 확보된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2년도는 쌀 생산이 7,270만톤으로, 즉 전년대비 23%나 감소하였다. 또 2003년에는 소맥 생산이 전년대비 10% 감소하는 등 기상조건 등에 의해 여전히 생산의 연차별 변동이 심한 편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는 한 10억대 인구를 부양하는데는 여전히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이러한 요소가 인도 자금정책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식량접근, 즉 사람들이 식량을 경제적으로 확보한다는 과제도 빈곤계층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인도를 포함한 많은 개도국들에게는 식량의 경제적 확보가 식량안보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식량생산의 연차별 변동 격심

인도에서는 농촌인구가 많아 쌀과 소맥 생산량의 60~70%가 종자용 및 식용 용도도 포함하여 농가에서 자가 소비되고 나머지가 유통된다. 유통되는 쌀의 30~50%, 소맥의 50~60%는 민간 유통되고 있다. 나머지, 즉 총소비량의 15% 정도가 공적배급제도의 식량공사에서 처리되고 있다. 농가는 쌀과 소맥 수확량의 일정비율을 식량공사에 의무 판매해야 하고, 공사는 농가판매가격보다 싼값으로 식량을 조달한다.

공사가 조달한 곡물은 식량이 부족한 주의 정부가 매입하여, 공적배급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장가격전포 등을 통해 일반 가격보다 보조를 받은 싼 가격으로 빈곤계층에게 소매로 판매된다. 여기서 빈곤계층이란 빈곤기준 이하의 층으로 전체 인구의 29%로 약 3억명에 달한다. 실제로 2000년 빈곤소득층 3억명에게 인도 의료연구협회가 추천하는 1일당 필요 곡물의 절반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물량이 1,900만톤에 달하는 규모이나 1,170만톤의 공급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농업대국 인도는 식량의 절대량 부족문제는 해결하였다. 그러나 인구대국인 관계로 분배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타나는 어려움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김태근 연구위원>

쌀협상 ‘中國 변수’로 난항...쌀농가 소득보전대책 발표

TRQ 8~8.9% 요구·KREI, “7.5% 넘으면 유예 실익 적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농특위가 11월 17일 개최한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에서는 쌀협상 내용이 공개돼 협상국들이 의무수입물량(TRQ)을 8~8.9%까지 요구하고 있고, 수입쌀 시판도 30% 이상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의무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7.5%를 넘어가면 관세화 유예의 실익이 적다는 관세화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언론들은 관세화 유예 여부를 떠나 농가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농민단체의 대규모 시위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북경에서 진행된 중국과의 7차 쌀협상은 양국이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일단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11월 19일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는 발표와 관련해, 미국의 지원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던 우리 쌀협상팀의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미국과의 협상, 그리고 중국과의 실무협상 결과를 종합해 12월 중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발표, 양곡관리법 개정

농림부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쌀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보장하는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을 발표하였다.

소득안정방안의 기본골격은 2001~2003년 평균 산지쌀값, 추곡수매제 소득효과, 논농업직불 등 최근 농업인들이 쌀과 관련하여 얻은 수입을 기초로 80kg 가마당 17만원 수준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로 보전한다는 것이다.

직접지불은 고정형직불금으로 1ha당 6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0%가 고정형직불금 보다 클 경우 변동형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목표가격은 2005년부터 3년 단위로 고정하여 운영하고, DDA협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11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쌀 시장 추가 개방에 대비해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를 내년 중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정부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농민단체는 쌀 농가 소득안정방안에 대해서 목표 가격이 낮아 소득하락을 실질적으로 보전하지 못할 것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농지법 개정안 의결...도시민 농지소유 허용 확대

정부는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혀 개정안이 예정대로 이번 국회 회기중에 처리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언론들은 이는 표면적으로 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해 주지 않던 농지의 임대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형식적인 점에 비춰 실제로는 도시민의 농지소유를 전면 허용한 셈이라고 분석하였다.

농업계는 토지의 이용계획에 대한 확고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 규제를 풀면 농지는 물론 국토 전반의 무분별한 난개발, 투기화, 우량농지 잠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농작물 재해 국가 보상...재해 200% 초과분 보전

기획예산처는 11월 9일 농작물 재해 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손해를 200% 이상의 큰 자연 재해에 대해서는 200%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 농작물 재해보험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등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가재보험제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큰 손실을 입었을 경우 민간보험사가 인수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해 정부가 이를 인수, 손해를 200% 이상 대규모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보험기금을 만들어 부담키로 하고 있다.

쌀 10a당 수량 504kg...전년비 14.3% 증가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9,000개 표본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금년 쌀 생산량은 5,000천톤(3,473만석)이라고 11월 22일 발표하였다.

이는 전년 4,451천톤(3,091만석)보다 549천톤(382만석), 평년 4,840천톤(3,361만석)보다 160천톤(112만석) 많은 것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쌀 생산량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5천ha(△1.5%)가 감소하였음에도 10a당(302.5평) 수량이 504kg으로 전년(441kg)보다 14.3%, 평년(488kg)보다 3.3%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김동원 전문연구원>

“한국농업의 도전과 비전”

2005 농업전망대회 1월 28일 코엑스에서 개최

우리 연구원은 2005년 농업전망대회를 2005년 1월 28일(금) 9시 30분부터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한국농업의 도전과 비전’이란 주제 하에 전일대회로 개최한다.

이번 전망대회는 쌀협상, DDA 농업협상, FTA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 등 심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있는 우리 농업의 상황속에 우리 농업발전을 위한 비전과 진로를 제시하고자 총 5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5부로 나뉘어 열리는 2005 농업전망대회 제1부는 ‘도전’이란 주제로 쌀협상 이후 국제동향, 영향, 유통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하고, 2부에서는 ‘비전: 새로운 활로’란 주제로 친환경농업, 식품안전체계, 농산물 유통, 수출 지역농업, 관광농업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제3부는 ‘전망 I’로 농업·농촌 경제동향과 전망을, 4부는 ‘전망 II’로 곡물, 축산, 임산물 동향과 전망을, 5부는 ‘전망 III’으로 채소, 과일, 과채 동향과 전망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망대회는 1998년 이후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기존에 오후에만 진행하던 행사를 전일행사로 치러 더욱 내실을 기하게 되었다.

우리 연구원은 2005년 농업전망대회와 관련하여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05 농업전망대회 참가 희망자는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나 전화(02-3299-4230, 429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원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우리 연구원 정우회(회장 유승우)는 지난 10월 30일 연구원 테니스코트에서 제2회 원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테니스 대회는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에서 틈틈이 연습한 테니스 실력을 발휘하고 직원상호간에 친목을 다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두 조로 나뉘어 복식으로 테니스 대회를 진행한 결과 A조 우승은 김병률, 박준기

조가 준우승은 박성재, 전상수 조가 차지했고, B조는 홍승지, 이병훈 조가 우승을 했으며, 준우승은 지인배, 허주녕 조가 차지했다.

원장, 대통령지문 정책기획위원 위촉

우리 연구원 이정환 원장은 지난 11월 5일자로 대통령지문 정책기획위원에 위촉되었다.

연구원 인사

- △(특별휴직) 전창근, 성명환 연구위원
- △(전보) 정민국 부연구위원(농업관측정보센터)
- △(파견) 김철민 부연구위원(국무조정실)

연구진 동정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11월 12일 경상대 농업과학연구소에서 열린 지역농업클러스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박동규 연구위원은 11월 10일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최지현 연구위원은 11월 5일 농식품유통연구원이 주최한 전통식품 수출전략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어명근 연구위원은 11월 29일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새해영농설계지도요원 교육에서 강의를 했다.

△김창길 연구위원은 11월 11일 전북대에서 열린 동북아 친환경농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이용선 연구위원은 11월 2일 농촌진흥청과 농어민신문사가 주최한 ‘고유가시대 농업 에너지 절감 대책’이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서진교 연구위원은 11월 2일 농특위가 개최한 회의에서 ‘확률적 동등성 비교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정민국 부연구위원은 11월 18일 한국야쿠르트사에서 개최한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 심포지엄에서 ‘원유수급 및 우수 소비 구조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송미령 부연구위원은 12월 3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농산어촌 발전을 위한 관광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11월 24일 열린 농촌진흥청 새해영농실제교육에서 ‘과실 생산 동향 및 전망’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KREI 작은음악회 개최



11월 5일 연구원 휴게실에서 KREI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문화활동 일환으로 지난 11월 5일 휴게실에서 KREI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가을을 맞아 직원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연구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초청된 연주자들은 기악과 4학년 학생들로 바이올린, 첼로, 플룻 독주 및 2중주, 피아노 3중주를 우리 귀에 익숙한 왈츠 가보트 등을 연주해 직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특히 마지막에는 우리 가곡인 ‘임

이 오시는 지’를 피아노 3중주와 플룻 연주로 맞춰 합창해 직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 연구원은 오는 12월 21일에는 가족들을 연구원으로 초청해 승려음악회를 기질 계획이다.